

응급실 뱅뱅이 막자는데...의사들은 왜 반대하나

의사단체 ‘호남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반대 입장
“환자 생명보다 이해관계 우선이나”...지역시민사회 비난 목소리

정부가 광주·전남·북에서 추진키로 한 ‘응급실 뱅뱅이’ 대책 시범사업에 대해 호남권 의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내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의사 측 성명문에 “진정한 응급실 뱅뱅이 대책은 의사들이 의료 소송에 휘말리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까지 실리자, “의사들이 효과적인 대안을 내놓기는커녕 집단 이해관계만 앞세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부터 광주·전남·북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응급 환자 이송 시, 기존처럼 119구급대가 병원 응급실에 일일이 전화를 돌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의료 자원을 실시간 공유하는 플랫폼

을 통해 이송 병원을 선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병원 전 단계 응급환자 분류체계인 Pre-KTAS 기준에 따라 환자를 5단계 중증도로 나눠 적정 의료기관을 배정한다. KTAS 1~2등급 중증응급환자는 광역상황실이 수용 능력을 확인해 이송 병원을 지정하고, 골든타임 내 병원을 찾지 못할 경우 우선 수용병원과 최종치료 병원까지 함께 지정하는 방식이다. Pre-KTAS 3~5등급 환자는 별도의 수용 능력 확인 없이 기존 이송 프로토콜에 따라 병원으로 옮긴다. 구체적인 지역별 이송 지침은 지자체와 소방본부, 광역상황실, 응급의료기관이 합의를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광주·전남·전북의사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려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안’은 타당성공론의 결

정체로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정작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이송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속의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의사의 역량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병원과 의료진에 민·형사 책임을 묻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응급실 뱅뱅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의료진 이탈이 발생하고, 과밀화가 심화돼 응급환자 처치 시간이 오히려 더 늦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운창 전남도의사회장은 “전남 지역은 필수 의사와 지역의사가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취약지부터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며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활용해 중증·경증 분류의 정확도를 높이고, 충분한 기반시설을 갖춘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지역사회 반응은 싸늘했다.

애초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가 적고 의사들이 ‘입원 거부’를 반복해 응급실 뱅뱅이가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책임 회피 방법만 궁리하고 있다는 것이 시민사회 지적이다. 특히 응급실 뱅뱅이로 가족을 잃은 시민들은 “의사들이 제도 개선을 시도해 보기도 전에 반대부터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광주시 북구에 거주하는 장행숙(68)씨는 “2022년 아버지가 코로나 위중했을 때 해남에서 목포, 광주까지 갔다가 병원을 찾지 못해 결국 여수까지 갔지만, 조치가 늦어 결국 돌아갔다”며 “의사들이 환자들을 인질 삼아 단체 파업에 나서지는 않을지 무섭다”고 말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응급실 뱅뱅이의 가장 큰 원인은 의료자원과 병원 정보가 소방과 의료기관 간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데 있고 이번 시범사업은 그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는 취지다”며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시범 과정에서 보완하

면 될 일이지, 시범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환자 피해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20대 간호사 A씨도 “뱅크 방지법”은 구급차가 병원 문 앞에서 전화만 돌리다 시간을 허비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한다”며 “의사들도 제도의 취지를 환자 생명 중심에서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진료과정에서의 리스크만을 앞세우는 태도가 치사하게 느껴진다”며 “당장 효과가 크지 않더라도 생명을 다루는 문제인 만큼 제도를 구체화하고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아직 시범사업에 대한 최종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구체적인 병원 지정 계획과 시범 사업 시행은 이달 중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1년 8개월 의정갈등 마무리 됐는데 광주·전남 응급의학과 의사난 지속

전남대병원 4명 모집 1명 지원
전공의·전임의 부족 현상 심화

600일 이상 이어진 의정 갈등이 마무리된 뒤에도 광주·전남 지역 병원 응급의학과와 전공의·전임의 인력난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원에 달하는 연봉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근무 강도와 의료 분쟁에 따른 법적 책임 부담이 전공의 지원 기피로 이어지면서 인력 부족 현상이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5일 전남대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은 지난 2일까지 응급의학과 전임의 4명을 모집한다고 공고했지만, 지원자는 단 1명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대병원은 인력 부족으로 진료전담교수 상시 모집공고를 내놓은 상황이다.

광주기독병원 역시 과 자체 모집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지원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의 부족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지난해 말 진행된 2026년도 상반기 전공의(레지던트) 모집에서 본원과 화순병원 등 6명 정원에 대해 지원을 받았지만 최종 선발 인원은 3명에 그쳤다.

응급의학과 전공의 전체 학년 기준 정원은 24명이지만, 현재 인원은 9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조선대병원 역시 이번 모집에서 3명을 예정받았으나, 지원자는 2명에 그쳐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현 인원은 8명으로 전체 학년 정원인 12명에 미치지 못한다.

기독병원은 응급의학과 전공의 정원(TO) 자

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응급의학과가 타 진료과에 비해 급여가 많은데도 모집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병원 자체에서 높게 부르기도 하고, 당직 수당 등을 많이 받다 보니 타과에 비해 수천만원 더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구체적인 병원별 연봉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응급의학과 평균 연봉을 광주 지역은 본봉 기준 최소 연 3억원에서 평균 4억5000만원 수준, 전남 지역의 경우 많게는 6억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정 갈등 이후 응급의학과 근무 여건이 열악해지면서 지원자가 더욱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인력이 절반 가까이 줄면서, 한달 야간 당직은 10일 안팎에 달하는 데다 교수진이 시술과 당직에 투입되는 빈도도 늘어나는 등 근무 여건이 열악해졌고, 자칫 형사 사건에 얽히면 의사 면허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의대생들의 지원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명을 요구한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의사 인력이 크게 부족해졌고, 정장화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응급의학과는 업무 강도가 높다 보니 학생들 사이에서는 기피 대상이 되고, 결국 수요는 높는데 공급은 적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원 의사가 없는 학생들을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광주 북구 상설 교복나눔장터 5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우산동 '상설 교복나눔장터'를 찾은 학부모와 시민들이 새 학기를 앞두고 북구새마을부녀회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자에게 입힐 중·고등학교 교복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200억원대 회삿돈 빼돌린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 항소심서 감형

광주고법 원심 파기 집유 선고

하청업체와 거래 내역을 부풀려 2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환)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세화아이엠씨 전 대표이사 유모(90)씨에 대해 원심(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10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전 임원이었던 유씨의 아들 유모(59)씨에 대해서도 1심 2건(징역 5년, 징역3년·집행유예 5년·벌

금 30억원)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전 임원 강모(51)씨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 2000만원으로 감형됐으며, 횡령 기담 직원 허모(46)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법인(옛 세화아이엠씨)에는 벌금 5억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2013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27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직원 수를 부풀리거나 공장 신축 대금을 유용하는 방법 등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들 유씨와 강씨 등은 2015년 6월부터 2017

년 12월까지 용역 공금 세금계산서를 43억원 상당을 부풀리고 82억가량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법인세·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 등 일부 혐의에 횡령액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 점, 공소시효가 완성된 점,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경영 위기를 벗어나 현재 상장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회사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포탈한 법인세가 모두 완납된 점, 횡령액 중 상당액이 계열사 지원 목적 등으로 쓰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